

# AI·에너지·지방분권 등 제도적 토대 마련했다

## ■ 행안위 통과 전남광주특별법, 과제 산적

시·도 요구 31개 필수 특례 중 19개 전부 또는 일부 반영  
국가 재정 지원 보장·전력 차등요금제 등 미반영 아쉬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 전환,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다만 국가 재정 지원의 구체적 보장과 전력 차등요금제 등 핵심 쟁점은 담기지 않았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법의안(386개)보다 27개 조문이 늘었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술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 특례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시·도는 정부가 볼수용한 119건 가운데 31건을 '필수 특례'로 추려 반영을 요구했

고, 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됐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집적 단지·지정과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됐다.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반영돼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 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해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도 담겼다.

수산·해양 분야에서는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특례가 반영됐고,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고부가 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특례도 포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조항이 들어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교육·의료 분야 특례도 눈에 띈다. 통합 국립대학 신설이 추진 중인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지역 의사 양성 지원 특례가 반영됐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의 자자권 강화 방안이 명문화됐다. 권한·사무·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의무도 규정했다. 통합특별시 위원회 선정 시 행정통합 취지와 인구·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지역·민족적 균형을 맞추도록 한 특례도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항과 국제 일부의 지방세 전환



**설맞이 민주당 합동세배**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열린 '2026 병오년 민주당 합동 세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 원로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민주당 합동세배'는 올해로 28회차를 맞이하며 광주·전남지역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자치단체장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과 세배식을 통해 연대와 정을 나누는 광주·전남 고유의 설 공동체 문화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 ‘인공태양 연구시설’ 8월 예타 통과·부지 보상 총력

### 10조 경제효과·일자리 1만개 등 산업·정주여건 전환 기대

전남도가 나주 왕곡면 일원에 조성되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은 국가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략 분야로 꼽힌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부지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국책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산업·정주 환경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19면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최종 부지로 나주 왕곡면 일원이 확정되면서, 전남은 미래 에너지 연구의 전략 거점으로 부상했다. 인공태양은

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현장 인력 채용 증가 등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된다.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 연간 2000명 이상 국내외 연구 진과 첨단 소재·부품 기업 인력이 유입돼 인구 증가, 상권 활성화, 배후 주거단지 수요 확대 등 도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국가 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의료·교육·문화 인프라가 동반 확충되며 도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재 유입이 순선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적기 부지 확보다. 전남도는 오는 8월 정부 예타 최종 통과를 목표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사업 필요성과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의 연계성, 산업 파급 효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다.

부지 조성도 병행 추진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총 103.4㏊ 규모 부지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에着手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 보상에 앞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12월까지 부지 정지공사를 마쳐 연구시설 건립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일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지역 설 민심’서 계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재명 정부 얘기만 끼니면 다들 기분 좋아 하면서 냉담이 이 정부를 탄생하는 데 기여한 보람을 느꼈다”며 “설을 앞두고 깨씨무늬방 보상금이 풀렸고, 보성에는 민생복지지원금이 전달된 것도 한몫했다”고 전했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광역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여당인 민주당 후보자가 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은 “시민들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이 일자리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르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시장을 비롯한 차기 리더의 핵심 요건으로 현 정부와의 강력한 국정 철학 연대와 실용적 지역 발전 역량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은 아직 통합 논의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어리둥절하고자기 한단”며 “통합 특별시 정주시무소는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의원은 “전남광주통합에 대해서는 솔직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기대하는 예비후보들이 대거 늘면서 시스템 공천과 적합·부적합 판정에 관심이 크게 고조됐다”고 말했다.

### ‘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하겠다”

#### 소나무당 해산 뒤 개별입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 복당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86세대 만행’인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 돈 봉투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대표와 당에 부담을 드리

지 않기 위함이었다”며 “그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허락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복당에 어떤 조건·전제·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 대표는 2023년 프랑스 연수 중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이 제기되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 뒤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2024년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

등 구체적 재정 특례는 이번 의결안에 담기지 못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역시 제외됐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의 자자권 강화 방안이 명문화됐다. 권한·사무·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도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가 특례 반영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지방위원회와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오늘 선고

### 12·3 비상계엄 443일 만 ‘정점’ 법적 판단

#### 한덕수·이상민 재판부 “계엄=내란” 인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연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현우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증인 혐의로 기소된 문·경찰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 광주시, 올해 지방공무원 624명 채용

### 행정통합·군공항 이전·통합돌봄 시행 등 행정수요 반영

광주시는 2026년도 624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21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이다.

광주시는 올해 채용 규모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민·군공항 통합 이전, 광주다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지원 인력 등 각종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공직 내 예상 결원(퇴직·휴직·정원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했다.

채용시험은 2회에 걸쳐 치러진다. 상반기에는 8·9급과 연구사 등 21개 직렬 615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7급과 연구사 등 4개 직렬 9명을 뽑을 예정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408명 △기술직군 213명 △연구직 313명이며, 직급별로 △7급 13명 △8급 53명 △9급 555명 △연구사 3명이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 272명(일반 248, 장애인 7, 저소득층 7, 지방의회 10)

△세무 11명 △전산 10명 △사회복지 107명(일반 101, 저소득층 6) △사서 8명 △공업 18명 △농업 8명 △녹지 12명 △수의 8명 △보건 10명 △식품위생 1명 △의료기술 4명 △간호 52명 △보건료 1명 △환경 10명 △시설 65명 △방재안전 11명 △방송통신 3명 △시설관리 5명 △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